

● **교육부총리, 참여정부
고등교육정책방향 피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3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초청하여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듣고, 참석한 대학총장들과 대학교육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 부총리는 기조연설에서의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이어 법학·경영학 전문대학원제 도입이 추진될 것이며, 내국세 일정비율을 대학에 투자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시의 잦은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현 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할 것이며, 대학의 실질적 자율권 보장을 약속하고 이와 함께 지역인재 육성 프로젝트를 통한 지방대 육성, 대학 특성화와 학과통폐합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개편, 사
립대 정책 '사학정책과'에서
총괄**

교육인적자원부 직제 개편의 주목되는 변화는 인적자원 정책과 국제교육 협력체제에 무게 중심이 실리고 분산되었던 정책과

지원 기능이 국 또는 과단위로 통합 조정되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우선 인적자원정책국의 경우 정책 조정 기능이 강화되고 새로운 인적자원 개발 수요에 부응한다는 차원에서 정책 조정과 학술·산학협력과가 신설되어, 정책총괄과와 정책분석과와 함께 4개과로 편제되었다.

이에 따라 과거 대학지원국에 소속되어 학술 활동과 대규모 재정 지원의 큰 축을 형성했던 학술진흥재단과 정신문화연구원, 학술원 등의 주요 산하기관 업무가 인적자원정책국의 컨트롤을 받게 되었으며, 지역인적자원 개발(RHRD)과 학술 산학 협력 등에도 무게 중심이 실리게 되었다.

또 국제화 시대에 부응한 협력체제 구축과 원활한 대외 협상 능력 배양 및 효율적인 교육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이 국제교육정보화국으로 격상되었다.

대학지원국의 주목되는 변화는 행정과 학술학사, 재정 등 기능 중심으로 편제됐던 과 단위 업무가 국립대 정책을 총괄하는 대학정책과와 사립대 정책을 총괄하는 사학정책과 등 대학 설립별 특성에 따라 업무가 재편되었으며, 학술 기능은 인적자원정책국으로

이관되고 학사기능만 담당하는 대학학사지원과로 이관되어 사실상 해당 분야 업무가 축소 조정되었다.

이 밖에 학교정책실과 교육자치지원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초·중등교육 정책과 지원 기능은 정책 수립과 교원인사, 교육자치제도와 교육재정정책 등 모든 초·중등 업무가 학교정책실로 일원화되어 통합적 정책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과학교육정책과가 신설되어 해당 분야 정책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교육인적자원부 기구는 2실 4국 4심의관 32과(담당관)에서 2실 4국 4심의관 33과로 1개 과가 늘었으나 정원은 4백 53명으로 변동이 없다.

한편 이번 직제개편과는 별도로 대학지원국 산하의 지방대학발전팀, 감사관실 소속의 기획감사팀, 기획관리실 소속의 업무혁신팀과 학교정책실 산하의 사교육비대책팀 등 4개 기능별 TF팀이 지난 달부터 가동되어 현업별 정책 기능을 보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출범이 임박한 교육혁신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 기능 축소를 요구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권고안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 **국립대 발전 추진실적 따라
400억 원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전국 국립대의 자체 발전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해 4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400억 원 중 63%(작년기준) 정도는 국립대 기능분화 연계체제 구축 등 3개 정책과제별로 선정될 우수대학 20여 곳에 선별 지원되며, 나머지는 대학별 학생 수와 교원 수 등을 기준으로 일괄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원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 동일 권역 지원한도를 정하고 대학 규모 및 성격별로도 대규모 일반대, 소규모 일반대, 방송통신대·산업대, 교육대로 나누어 평가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3개 국립대가 제출한 자체 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를 하고 8월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 뒤 9월 중에 지원대상 우수학교를 선정해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 **2007년까지 지방대 10곳
연구중심대학 육성**

정부는 2007년까지 10개 지방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되는 지방대는 각각 연간

1백억 원씩 10년 동안 모두 1천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총 1조 원이 10년 동안 투자된다. 아울러 지역별 공동연구시설 등 연구시설 설립과 핵심 연구 인력도 지원받는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방화 시대에 맞춰 지방대를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별로 연구중심대학을 선정, 육성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에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2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어 2007년까지 한 해에 2~3곳씩 선정해 나갈 방침이다.

그리고 연구실적 연구기반 등을 평가, 연구중심대학을 선정되 지역별로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대의 연구중심 축인 부설연구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도 지방대 부설 연구소 7백10개가운데 약 5% (4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대가 지역산업의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소와 지방대학 간 인력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부는 이미 원자력 관련 싸이클로트론 연구소를 조선대와

경북대에 설치하도록 했으며, 기초과학지원연구소 분소 5곳 중 2곳을 올해 안에 광주과학기술원과 제주대에 설치할 방침이다.

● **IT 관련 학과 대학(원)생
인턴연수에 6억 원 지원**

IT(정보기술) 관련 학과의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IT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인턴연수를 받을 경우 정보통신부로부터 1인당 연간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IT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6억 원 규모의 IT 분야 대학생·대학원생의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올 가을학기부터 내년 봄학기까지 12개 대학에서 300여 명의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으로 학생 1인당 연간 300만 원(학기당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사전교육비와 인턴십 부대운영비조로 각각 최고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연수대상기관은 국내외 IT 관련 기업 또는 연구소이며, 연수생 1인당 월 50만 원 이상의 연수보조금을 정보통신부 장학금과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산·학·연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인턴십 참여대학을 선정

하며, 선정된 대학은 자체적으로 연수생을 선발한다. 연수생으로 선발되면 연수기간에 대해 학점을 인정받으면서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기업의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 2004년 의대 정원 156명 축소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1백56명 줄어든다. 또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3백51명까지 정원이 감축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입학 정원 1백56명을, 2005년에는 학사 편입생 1백14명을, 2006년에는 의학전문 대학원(경북대 등 7개 대학) 입학 정원 39명을, 2007년에는 정원 외 특례입학 인원 42명을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의대 정원 3천5백 명의 10%가 줄어드는 셈이다. 학교별 정원 감축규모는 서울대, 전남대, 조선대가 각각 15명으로 가장 많다. 또 ▶연세대, 충남대, 한양대, 경희대가 10명 ▶가톨릭대, 고려대, 순천향대, 연세대(원주), 인제대(부산)가 7명 줄어든다. 정원이 50명 미만인 제주대, 대구가톨릭대, 단국대(천안) 등 아홉 곳은 변동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수가 적정 규모를 초과하면 경쟁이 격화되

어 의사들이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현재 우리 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사는 1백30명(한의사 포함하면 1백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적정선(1백50명)보다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의사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보다 빨라 2007년에는 적정선을 초과하고 2012년에는 의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 감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 ‘로스쿨 도입’ 4년만에 재검토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과정 등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4년만에 본격적으로 재개된다.

대법원은 사법부와 법무부, 대한변협, 교육인적자원부, 학계,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조인 양성 문제를 원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토론회에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반대’라는 종전의 입장을 철회하기로 방침을 정해 앞으로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시험 응시자가 연간 3만 명이 넘는 등 대

학이 고시학원처럼 변질되고 사시 합격자가 연간 1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법조인 양성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은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꼽혀 왔으나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정부에서 논의만 하다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1999년 대통령 자문기관인 새 교육공동체위원회는 미국식 로스쿨 제도를 모델로,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친 사람들에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건의했다. 그러나 같은 해 또다른 자문기관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종전 사법연수원을 대체하는 ‘한국사법대학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내놓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일본의 경우 10여 년 간의 논의 끝에 올 들어 미국식 로스쿨과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초까지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상정하기로 한 상태다.

● 2005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 행정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을 행정예고하고, 8월 말께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2005학년도 수능은 시험일이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11월 첫째 수요일에서 셋째 수요일로 바뀌어 2004년 수능(11월 5일)보다 2주 늦은 11월 17일 치러지며 성적발표도 12월 14일로 늦춰진다. 또, 고교 학교 생활기록부 작성 기준일도 12월 3일로 2004학년도 입시보다 2주 늦어져 수능 후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입생 선발은 예년과 같이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정시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정시모집도 가, 나, 다 등 3개 군으로 구분해 실시하지만 각 군별 전형기간은 예년보다 짧아진다.

수시 1학기 원서접수는 내년 6월 3일~16일, 전형은 7월 19일~8월 19일, 등록은 8월 23일~24일에 각각 실시되며, 수시 2학기는 9월 1일~12월 13일 사이에 대학별로 2~4일 간 원서접수와 전형이 실시되고 등록은 12월 20일~21일 이틀간 받는다.

정시모집은 12월 22~27일 원서접수(인터넷 접수는 26일 마감)를 거쳐서 ▲가군은 12월 28일~2005년 1월 11일 ▲나군은 2005년 1월 12~23일 ▲다군은 2005년 1월 24일~2월 2일에 각각 전형을 실시하고 2월 18일까지 등록과 미등록 충원을 거쳐 2월

19~28일에 추가모집 전형을 실시한다.

2005학년도 대입에서도 수시 1학기에 합격하면 수시 2학과 정시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고, 수시 2학기에 합격하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특히 전문대 수시모집 합격자도 대학의 모든 모집에 지원할 수 없고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도 모집시기가 다른 전문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 우수 지방대학 39곳 6백억 원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지방대학 육성사업 지원 대상으로 충북대와 건양대, 경상대 등 39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별로 8억 원에서 20억 원씩 모두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있는 126개 지방대학 가운데 사업계획을 제출한 119개 대학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39개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사업 가운데 특색 있는 것으로는 공주대의 백제문화 원형복원센터 설립, 전주대의 친환경 유용 미생물 사업, 경상대의 산학협동 연구단지 조성 등이다. 지방대학 육성사업은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재

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지난 해보다 지원금액이 100억 원 늘었다.

● 특성화 우수 30개 대학 선정

교육인적자원부는 경남대, 경일대, 동명정보대, 동양대, 한양대 등 2003년도 특성화 우수대학 30개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 재학생 수 1만 명 이상 대규모 대학으로는 경남대, 고려대, 명지대, 성균관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홍익대 등 9개교, ▲ 재학생 수 5,000~1만 명의 중규모 대학은 건양대, 대구한의과대, 대전대, 목원대, 서울시립대, 인제대, 인천대, 천안대, 호남대 등 9개교, ▲ 재학생 수 5,00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은 경동대, 경일대, 경주대, 대불대, 동양대, 안양대, 영동대, 추계예술대, 한국항공대 등 9개교가 선정되었다. 산업대학에서는 동명정보대, 우송대, 한국산업기술대 등 3개 대학이 특성화 우수대학으로 인정됐다.

이번 특성화 대학에 선정된 대규모 대학에는 9억 3,000만~12억 원, 중규모 대학에는 8억~12억 원, 소규모 대학에는 7억 6,000만~10억 1,000만 원, 산업대학에는 9억~11억 원의 재정지원이 각각 이루어진다.

● 지방대학 육성 5년간 연 3천억 원씩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이 각 지역별 산업체와 연구소,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단을 구성해 추진하는 지역별 특성화사업에 연간 3천억 원씩 5년간 1조5천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립대 발전계획 추진(2003년 예산 4백억 원)', '지방대 육성 사업(5백억 원)', '공·사립대 특성화(1천1백50억 원)' 등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크게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3천억 원)' 과 '수도권대 특성화사업(1천1백50억 원)' 으로 조정, 기획예산처와 협의 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방대 육성 사업은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만큼 사업 목적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만 지원액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 다른 부처의 대학 지원사업 등을 고려해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방안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및 사회와 연계해 특성화 사업을 추진,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지방대학 단독으로 추진하는 자체 특성화 사업에 돈을 지원하던 현행 지방대학 육성사업과 차별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대학이 주도하는 지역별 사업단에서 지역 인재의 양성에서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지역의 산업·문화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유도하는 게 이 프로젝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 '학벌극복' 종합대책 수립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학벌극복 합동기획단' 1차 회의를 열어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 등 4대 중점과제를 채택했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능력중심 인사관리 시스템 정착 ▲대학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대학서열구조 개선 ▲학벌 관련 각종 차별 해소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진로지도 내실화 등을 4대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이들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기획단 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1월까지 주요 과제 세부 시행계획

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8~9월 중 근로자, 인사담당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용관행에서 학벌이 끼치는 영향과 대안 등을 조사하고 9월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이 느끼는 학벌문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인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회의에서 "학벌문제 극복은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라며, "경제·사회·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 학벌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획단은 교육인적자원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여성부,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 등 8개 부처의 국장과 경제·노동계,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의 민간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되었다.

● 이공계 입학정원에 여학생 배정 의무화

앞으로 이공계 대학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까지 여학생 입학을 늘리게 되고 여성과학기술인 재직자가 30인 이상인 기관에는 별

도의 여성과학기술담당 직원을 배치하게 된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안이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이 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장관은 이공계 대학 등 학위 과정에 있는 재학생 중 최근 3년간 여학생비율이 평균 30% 미만인 학과·학부별로 여학생 입학 목표 비율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대학에 목표 비율 달성을 권고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고 및 법인단체에서 이공계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부장관은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출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계획 및 시책'을 종합, 인적자원개발회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연구기관 및 대학·정부 투자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전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국·공립 대학 중 여성과학기술인 재직자가 30인 이상인 기관장은 임기 2년의 여성과학기술담당 직원을 배치,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촉진 및 지위향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 구성 등 일부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시행령이 공포 이후 예산 확보와 함께 단계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이공계 미취업 석·박사 지원 대폭 확대

취업하지 못한 이공계 출신 석·박사 인력의 연구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이 하반기부터 대폭 확대된다.

과학기술부는 올해 연수지원사업 예산이 20억 원에 불과해 상반기 156명을 지원하는 데 그쳤으나, 80억 원의 추경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800여 명을 추가로 선발해 다음달부터 연구현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진연구자 연수지원사업'은 이공계 출신 미취업 석·박사 인력을 발굴해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국·공립연구소,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지난 98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선정된 연구원은 1년 동안 매달 석사 120만 원, 박사 150만 원의 연구수당을 받게 된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과 지방소재 기관, 국가핵심전략분야 신청자 등을 우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부는 연수지원사업이 시작된 1998년부터 지난 해까지 5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취업 석·박사 7천207명의 연수를 지원해 왔다.

● 대학원 대학 설립 운영 관련법 의결

정부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공동으로 '대학원대학'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육성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원·산업기술연구원 공공기술연구회 소관 19개 연구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한국원자력연구소·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이 공동으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가칭)' 설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기 4년의 총장은 이들 연

구기관이 선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으로 18명 이내의 '대학원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 대학 운영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 대학보유 기술이전 매뉴얼 발간

산업자원부와 한국기술거래소는 대학의 원활한 기술이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무 매뉴얼을 발간·보급한다고 밝혔다.

매뉴얼은 기술이전과 관련된 법 제도는 물론 우수한 기술의 발굴, 평가, 마케팅 및 협상·계약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사례와 함께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매뉴얼의 전체 내용은 한국기술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ttc.or.kr)에 게재되었다.

● 교육혁신 로드맵 발표

국립대학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에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학교설치령」이 2004년까지 개정된다. 대학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탁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하고, 사립학교 분류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장관 직속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를 설치하는 법 규정도 2004년까지 입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립대학에 이사회가 설치되면 총장에 집중된 의사결정 권한이 줄어들게 되어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가 보다 민주화될 것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로드맵에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간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고, 이같은 대학 구조조정시 귀속 재산 처리 및 학생·교원 보호 방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오는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교육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해 교사회·학부모회 설치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개정을 2005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오는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05년 수능 결과 분석 후 사교육 열풍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대학입시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전문대학도 내년부터

수시모집 실시 허용

일반대학에서만 실시해 온 신

입생 수시모집이 2004학년도부터 전문대학에도 도입된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학생의 진학 기회 확대와 전문대학의 학생 선발 방법 다양화를 위해 전문대학에 수시모집을 허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면 전문대학들은 오는 2학기 중인 9~12월 수시모집을 실시하고 수시합격자들은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하지 못한 채 합격한 대학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전문대학의 졸업 후 교육과정인 1년 미만의 '전공심화과정'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등록요건을 '전문대학 졸업자'에서 '전문대학 졸업자 중 동일계열 졸업자'로 강화했다.

● 이공계 대학 '현장실습 학점제' 지원키로

정부가 대학의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해 이공계 대학의 '현장실습 학점제' 지원에 나섰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신청한 12개 대학 중 평가를 거쳐 선정된 9개 대학(산업대 포함)을 '현장실습 학점제' 대학으로 지정하고 1억 원 한도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통비, 지도교수 수당, 교재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9개 대학은 충

북대·경북대·영남대·한국기술교육대 등 일반대 4곳과 한밭대·한국산업기술대·진주산업대·동명정보대·서울산업대 등 산업대 5곳이다. 이들 대학은 2003학년도 2학기 또는 겨울방학 중 '현장실습 과목'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실습 학점제는 학기 중(학기제)이나 방학 중(계절제)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2학점(계절제)~18학점(학기제) 내외의 학점을 부여하는 학제로 학생들은 전통적인 이론 위주의 공학교육에서 탈피해 산업현장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체득함으로써 전공과 향후 진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고, 산업계는 대학교육체제의 변화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우수 인력을 공급받아 신입사원의 재교육비용을 절감하고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엔 시범적으로 지원되는 9개 대학에 대해 1년 후 성과를 평가해 결과가 좋을 경우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직무능력표준 2005년 도입 계획**

대학교육이 이르면 2005년부

터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전면 개편된다. 또 시험 없이 교과과정 이수만으로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일정 수준 자격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개인 업무능력을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Korean Skills Standard, KSS)'을 산업현장 요구를 토대로 마련해 이를 통해 대학교육과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S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능력과 이에 대한 평가기준을 직무영역과 난위도별로 정한 표준을 말하며, 이를 통해 개인이 어떤 직무를 어떤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KS가 생산품에 대한 표준이듯이 KSS는 사람 능력에 대한 표준이다.

현재 대학이나 직업학교 등에서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이 이루어져 기업들이 전공자를 채용해도 다시 가르쳐야 하는 현실이고, 자격제도 역시 평가기준이 진부하고 기술 변화에 뒤쳐져 능력평가 잣대가 못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또 개인이 학교나 기술학원에서 KSS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마치면 별도

로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자격을 주고, 일정 수준 자격을 갖추면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는 국가자격 인정체제(Korean Qualification Framework, KQF)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자격기본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후 KSS와 KQF를 제정해 이르면 2005년 초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KSS와 KQF가 도입되면 대학 등이 기업에서 환영받는 인력을 배출하고 자격증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 **대학입학 1학기 수시모집 폐지 추진**

대학 입시에서 신입생을 조기 선발하기 위한 수시 1학기 모집 제도를 이르면 2008학년도부터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수시 1학기 모집이 도입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상당수 고교·대학들이 반대 입장을 보여 온 점을 감안하여 폐지를 포함한 보완책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일선고교 교사와 교수 등을 대상으로 수시 1학기 모집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이는 등 체계적인 의견 수렴에 나섰다.

2002학년도 입시 전형 때 처음 실시된 수시 1학기 모집 제도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외의 다양한 기준과 방법으로 신입생을 조기 선발함으로써 대입 전형의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특히 수험생에게는 대학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 측면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합격생들이 2학기 학교수업을 소홀히 하는 등 정상적인 고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학 입장에서조차 실효가 별로 없다는 불만이 나오는 등 고교와 대학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포고 교장은 이와 관련, “정상적인 학습 분위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특히 고3 담임교사들은 수시 원서 작성 등 연중 입시 준비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입학처장도 “정원의 10% 정도를 뽑기 위해 비용을 들이면서 수시 1학기 모집을 해야 할 명분이 적다.”며 “뽑아 놓은 합격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한계가 많아 학생들을 방치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

자원부는 이에 따라 우선 수시 1학기 원서접수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최소화하고 여름방학 중에 전형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도를 시행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대입 제도 변경이 민감한 사안인 점을 감안해 3년 정도의 예고기간을 둘 방침이어서 폐지가 결정되어도 빨라야 2008학년도 전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함께 예·체능 분야 등의 우수 특성학생을 조기 선발하는 제도는 부분적으로 유지하되 합격생에 대해서는 곧바로 가을 학기(2학기)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교육부총리, 전문대학원 체제 적극 확대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해 전문대학원 체제를 적극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서울 힐튼호텔에

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간담회에서 ‘21세기 지식기반시대의 국가인적자원정책’이라는 주제로 행한 강연에서 소득 2만 불 시대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전반에 걸친 질적혁신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 “의·치의학전문대학원에 이어 경영·법학전문대학원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전문대학원체제를 다학문, 국가전략 분야로 적극 확대할 계획이고 이는 과열된 대학입학 경쟁 완화와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IT, BT 등 6개 국가전략 분야의 인재양성을 위해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고 이공계 출신의 사회·경제적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기업인들에게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와 지방대학 출신 학생 및 여성인력에 대한 차별적 고용을 없애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